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0.(수) 10:30 배포 2023. 5. 9.(화)

규제혁신 1년, 현장이 변화하고 있다

- ①**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개선 제1호 현장사례** →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고도제한 범위축소**(200→50m)로 **인근기업 제조공장 증축중**

  ②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관련 **실현가능한 환경보전 조건 부과 후 승인** → '26년 케이블카 운행을 통해 **연간 관광객 50만명, 1,300여명 고용창출**

  ③**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입국자 年 **4,300만명 혜택**

  ④**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 **가평 산간지역민, 펜션에 드론배송 사업중**

- **1,027건** 규제의 **법령개정** 등 **개선조치 완료** → **70조원의 경제효과 창출**

- 이 밖에도 핵심규제 개선 위해 **국회 계류중인 80개 법률의 조속통과 노력**

□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출범후 지난 1년동안 1,027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였다.

○ 동 과제들은 ①**국민불편 초래 행정편의적 규제**, ②**시장경제 발전에 발목잡는 규제**, ③**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개선**한 것이다.

* ① ▲**(국민불편 해소)** 여행자 휴대품 신고사 작성의무 폐지 등 312개 과제
② ▲**(중소기업 부담경감)**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등 224개 과제
② ▲**(투자·일자리 창출)**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349개 과제
③ ▲**(신산업 활성화)**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142개 과제

* 법률 55건(40개 법률),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과제

○ 이 중 경제효과 기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검증
(투자)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4.4조),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7조) 등
(매출) 수산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1,000억),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1,900억)
(부담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2.1조),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1조)

<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 성과 >

□ 정부는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우선,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문화재 보호구역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하였다.

○ 각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하여,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개선,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를 시행**하였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허용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하였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하여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4조원의 투자유치,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천여명 고용을 창출**('23.3월 기준)하였다.

○ 또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개별 전환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중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64건은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규제혁신 완료 사례에 대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여,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된 **실제 국민들의 삶을 확인**하고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확인**하였다.

* 총리실 유튜브(youtube.com/primeministerkr),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규제혁신 SNS(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등을 통해 현장 변화·국민평가 등 17편의 영상확인 가능

[경기 광주 가마터]

[인천공항 휴대품 신고]

[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대구 이마트 만촌점]

□ 국무조정실장(방문규)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하여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온라인 배송 허용)

□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주요 현장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현장변화 사례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월)

▸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500m→200m **이내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 등 **현상변경 규제**를 **반경 200m→50m로 축소**하였다.

- 200m 이내이더라도 고도제한 등 형상변경 규제를 더욱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50m까지 축소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한울상사)은 **광고물 제조업 소매점을 1층→2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올해 7월**에는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하여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을 해제할 예정**이다.

▸ 이 같은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중**이며,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강도** 등을 **조정중**에 있다.

- 앞으로도 **남은 보존지역**(서울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의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 광주 및 부산 당숲과 같은 사례를 **전국에 조속히 확산**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다.

* 지역주민 편익, 재산권 활용제약 해소가 이루어져 4,590억원 창출 전망

현장 목소리

▲(한울상사 대표)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인한 층고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단층으로 건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규제 완화로 복층 구조로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늘어난 업무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공장이 입지규제로 부지가 부족해 같은 업체임에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한데, 이 같은 규제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시 관계자) "문화재가 위치하는 환경과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또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강원도 양양군-환경부, '23.2월)

▸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조건들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 (당초) 산양에 직접 GPS를 달아 위치추적(포획 또는 구조개체 필요하나 사실상 확보 불가)
(개선) 흔적조사 및 사업지구 내 과거 산양 행동권 분석자료 검토로 대체 등

▸ 이를 통해 **'23년말 착공을 시작**하여 **'26년에 케이블카 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아이** 등 **국민 누구나 설악산의 대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 또한, **지역경제**에는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및 안내요원 등 **1,300여명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목소리

▲(등산객) "케이블카를 통해 이곳의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대되고, 교통약자인 어르신·아이들과 함께 산을 올라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양군청 단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청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해서 환경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가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규제심판, '22.12월)

▸ 정부는 **대형마트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한편,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23.5.10. 현재 국회 산중위 소위 논의중)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형마트-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23.2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홍보, 연계사업 지원, 시장운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추진**하고 있다.

▸ **청주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완료**하여 **오늘(5.10)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다.

- 향후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SSM가 순차적으로 주말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해관계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쇼핑 편의성 증진**과 **인근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장 목소리

▲(대구 이마트 만촌점 방문 시민) "일요일에 대형마트 문이 닫혀있어 곤란하였는데, 이제는 주말에 대형마트로 놀러갑니다."

▲(대구 이마트 만촌점 점장) "영업하는 일요일에 점포 인근 유동인구 증가가 체감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규제혁신전략회의, '23.3월)

▸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1일부터 폐지하였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 제외 **99.5%인 7.1만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였다.

* 자진신고자 :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

▸ 앞으로 **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19년 기준)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편의가 향상**되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1,600만명 중 99.9%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현장 목소리

▲(입국자1) "좁고 정신없는 비행기 안에서 볼펜 찾고 이것저것 쓰는 것이 귀찮고 불편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입국자2) "평소에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느라 대기를 해야 했는데 신고물품이 없는 사람을 위한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대기 없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과장) "여행자가 출구로 나왔다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되돌아가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불편·혼잡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5.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행안부·국토부, '22.7월)

▸ 가평지역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방문·음식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파블로항공)을 도입하여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배달** 등이 편리해졌다.

▸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개별 비행승인**과 **드론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속하게 비행승인을 허가**하였고, 행안부에서는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평군에서 **세부주소를 지정**하여 드론 배송을 위한 **이·착륙 지점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차로 이동하는 것 대비 **이동거리가 69% 단축**(52→16km)되고, 청평시내-수목원까지 차량으로 40분의 배송시간을 **드론 배송을 통해 15분 이내로 단축**하게 되었으며, **배송비**(평균 15,000원)**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 목소리

▲(파블로항공 이사) "가장 중요한 이착륙 부지를 행안부 드론배달점 구축 과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확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야간비행 등 특별비행승인 관련 규제가 추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가평 아도니스 펜션 사장) "원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운전해서 나가야했는데, 그마저도 술을 마시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오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가평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 "드론배송이 신기해서 이곳 근처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놀러온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자주 사용해서 저희와 주민들 모두 윈윈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에 대해 그간 **불명확한 업종코드(화학 vs 정유)를 명확**하게 하여 **화학관련 산단에 입주가 가능**하게 하고(입지규제 해소),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을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변경**(환경규제 해소)하여 **LG화학 당진공장**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었다.

▸ LG화학은 지난 3월 석문산업단지에 3,100억원 규모의 **열분해공장과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하였다. 동 공장은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 가능**해져 **새로운 친환경시장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붙임 1: 주요 현장변화 사례 리스트
붙임 2: 분야별 인포그래픽
붙임 3: 핵심 개정필요법안 목록(10개)
붙임 4: 규제혁신 완료과제 경제적 효과 분석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담당자	사무관 정대현 (044-200-239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주요 현장변화 사례 리스트(17건, 영상 제공)

분류	과제명	주요내용
장기 미해결 과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ㅇ 규제범위 조정(1,665건) 및 문화재청 허가를 받는 구역 최소화 -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인근 제조업 건물 증축 허용
	대형마트 상생협약	ㅇ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규제심판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22.12) - 대구(2월~)·청주(5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소비자 편의 제고, 주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용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41년간 지지부진하였던 케이블카 허용 - 연간 이용객 50만명 예상, 올해 안 착공 예정
민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ㅇ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5.1~) - 4,300만명 신고서 작성 불편 해소, 연 215만 시간 절감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개선	ㅇ 여객선을 통해서도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허용 - 섬마을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펜션·식당 운영 불편 해소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 허용	ㅇ 자동차의 이동주유는 원칙적 금지,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허용 - 장거리·장기간 산불화재 진압시 신속한 소방대응 지원
	리브엠 알뜰폰 사업 허용(KB)	ㅇ 규제샌드박스로 추진중이었던 KB 알뜰폰 사업을 정식 허용 -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통해 고객편익 증진
신산업	산간 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ㅇ 물류 배송 취약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편의점 물품 및 치킨배달 등 가능, 주민 및 관광객 생활 편의 개선
	자율주행 배달로봇 ((주)모빈)	ㅇ 자율주행 로봇 보행자 통로 통행 제한 및 개인영상정보 수집 제한, 규제샌드박스 및 법률개정 통해 허용 - 계단 등 장애물을 넘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아파트 내 거주민에게 배달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롯데오토케어)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탑재한 밴을 활용하여 전기차 장기렌터카 고객대상 방문형 충전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활성화	ㅇ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 혁신적인 배터리 교환 시스템 확충, 4,100억원 투자 창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ㅇ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방법에 오프체인 방식을 허용(부산 블록체인 특구)하여 신선식품 유통이력 실시간 관리 서비스 개발
투자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ㅇ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자체연료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 - 3,100억원 규모의 LG화학 열분해공장 착공('23.3월)
	광양 포스코 공장 신설	ㅇ 광양 포스코 공장 투자대기 프로젝트 관련 입지규제 해소 - 유권해석 확대, 시행령 개정 등 통해 총 4.43조+α 투자 견인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ㅇ 5년마다 수립되는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허용을 통해 저장탱크 설치 가능 - 선박용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 확대 지원, 9,300억원 투자·건설중
	반도체 입지규제 완화	ㅇ 반도체 단지에 용적률 최대 1.4배(350→490%) 상향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공장 확대를 통해 약 24조의 투자유발 전망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ㅇ 공장 건설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관련 사정변경 발생, 건축물 철거·재시공이 기본이나, 대신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공사 계속 허용 -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충사업 진행중, 4조원 투자 및 약 1,800명 일자리 창출 예상

붙임2 분야별 인포그래픽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국무조정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규제 완화

경기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개발행위(고도제한 등)
허가 구역을 **문화재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
건축물 신·증축 절차 간소화

* 경기 광주 조선백자 요지 허용기준 조정('23.2월)

경기 광주 지역 문화재 규제개선 사례(제1호) 전국 확산으로 지역개발 활성화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제1호 사례 **전국 확산**
→ **문화재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지역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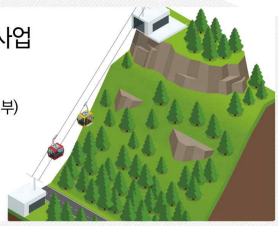
전국 1,665건 기준 재조정
→ **서울시의 4.3배 면적 재산권 규제 합리화로**
4,590억원의 지역주민 등 편익 제고

장기 미해결 규제 해소

2.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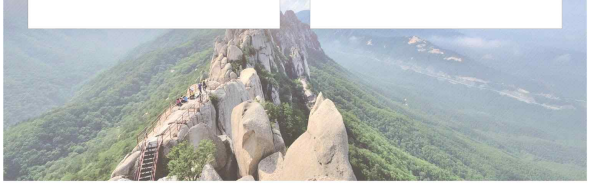
*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23.2월, 환경부)
* '23년 착공, '26년 운행 계획



관광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어르신·아이 등
모든 국민의
설악산 조망권 보장

관광객 연간 50만명,
신규 고용 1,300여명
창출 기대



3.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 규제심판회의('22.8월)를 통해
  대·중소유통 **상생협약 체결**('22.12월)
- 지자체 자율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 대구(일→월, '23.2월~), 청주(일→수, '23.5월~)
*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논의 중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이용 편리성
제고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국무조정실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입국 시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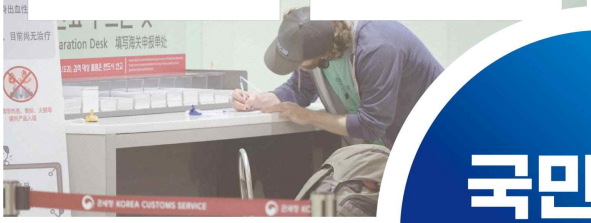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23.5월, 관세청)

'23.5.1부터 시행

국민편의 제고 및 자원 절약 효과

연간 **입국자 4,300만명** 신청서 작성 면제로 **입국편의 향상**

신고서 등 **자원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지원**



2. 섬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규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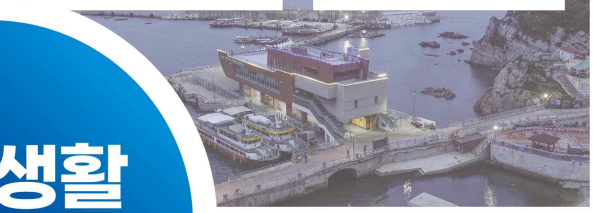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냉매·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을 통해 적재·운송 가능

* 「위험물선박운송규칙」 개정(~'23.5월, 해수부)

섬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영업자 부담 완화

전국 **242개 섬**에서 **냉장고·에어컨 신규 구입 및 수리 가능**

주민 생활 및 숙박·음식 영업 불편 해소



국민생활 불편 해소

3. 재난현장 소방 차량 이동주유 허용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에 이동주유** 전면 허용

* 「재난현장의 자동차에 대한 이동주유 안전기준」 제정('23.4월, 소방청)
* 규제정비 완료까지 단속유예 병행

소방현장 대응력 및 효율성 제고

소방차량 화재진압 중 연료소진 시 주유 후 복귀해야 하는 애로 해소

4. KB 리브엠 알뜰폰 사업 허용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입 허용**
(혁신금융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

*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공고 결정('23.4월, 금융위)

KB 국민은행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및 만족도 제고

국민의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다양한 **금융-통신 연계 서비스 혜택 제공**

* 리브엠, 통신사 고객만족도 조사 3회 연속 1위 ('21.하반기~'22.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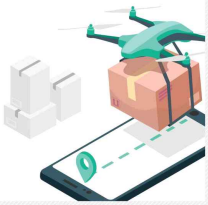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국무조정실

1. 산간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 개시

경기 가평 등 **물류배송 취약지역**의 주소·이동경로 등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주소기반 데이터 구축·제공('22.10월, 행안부)



연관 산업 성장 및 국민 편의 제고

차량 대비 이동 거리 69%(52→16㎞), **시간 63%**(40→15분)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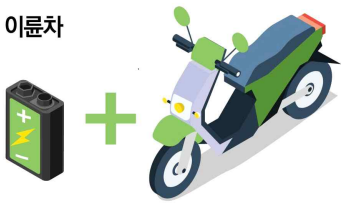
협약 점포 매출 상승, 드론 연관 산업 성장

* 주소기반산업 '30년 1.2조원 전망

2.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개편안 마련 ('23.3월, 환경부)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제고

'23년 4만대 보급, 환경저감 비용(220억원) **절감**

이륜차 구입비용 및 충전시간 절감

* '23년 이륜차 4만대, 320억원 보조금 편성

미래대비 신산업 지원

3. 전기차 방문충전 서비스

전기차 대상 긴급 또는 정기적 **방문형 충전서비스** 제공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22.10월, 산업부)

환경보전에 기여 및 이용자 편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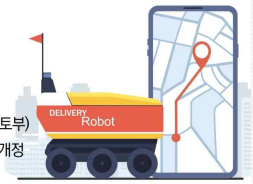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에 기여

방문서비스로 이용자의 긴급상황 대응 및 시간 절감

4.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22.8월, 국토부)
* 「도로교통법」('23.4월, 경찰청) 등 관련법 개정



로봇분야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증진

배달로봇 기술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 로봇시장 연 13% 성장 ('30년 831억달러) 전망

배달서비스 효율 증대 및 소비자 편익 증대

* 배달비 약 3,000원 →900원으로 감소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국무조정실

1. 반도체 생산시설 용적률 규제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 1.4배 상향(최대 350% → 49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3.3월, 국토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5~6라인) 투자 및 고용 창출

투자 40~50% 증가 기대
(라인당 30조원 → 42조원)

클린룸 증가로 약 6천명 고용 증가 효과
(클린룸 12개 → 18개, 클린룸당 1천명 고용)

2.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완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 업종 코드반영 및 **재활용 시설로 정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2.11월, 환경부)
* 표준산업분류 명확화('22.12월, 통계청)

LG화학, 당진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3,100억원 투자

생산액 2,300억원, 부가가치 770억원, 신규 고용 150여명 창출 전망(충남도)

연간 2만톤 규모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탄소발생 저감 기여

투자·일자리 창출

3.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철강사업용 산단 부지에 철강연계 계열사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계열사 입주 허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3.12월, 국토부)

포스코, 광양 산단에 4.4조원 이상 투자(~'33년)

연간 생산유발효과 3.6조원, 부가가치 1.3조원 창출 예상

연간 9천여명 취업 유발 효과 기대

4. 오창 이차전지 공장건설 지원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재시공 없이 공사** 가능
* 안전성평가 신속 진행('23.1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LG에너지솔루션, 투자 촉진 및 비용 절감

이차전지 공장 건설 4조원 투자 및 1,800여명 고용 창출 예상(~'26년)

공기 지연(3~5개월) 및 해외 업체 계약 불이행 피해(위약금 150억원) 방지

붙임3 핵심 개정필요법안 목록(10개)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1	문체	**문화재영향진단법**제정	**문화재 주변 행위 규제개선**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의 이원화된 규제로 허가 등 지연 [개선] 개발예정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수행시 문화재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영향진단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허가 의제 처리	상임위 소위 회부 (23.2.9)
2	농해수	**항만법**	**항만배후단지 국유재산 사용 특례기간 확대** [기존]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20년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가 가능 [개선]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30년으로 특례 확대	상임위 소위 회부 (23.2.21)
3	산중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영업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 [기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시간에는 온라인 영업도 불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 [개선]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라인 영업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	상임위 소위 상정 (21.11.23)
4	산중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기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개선]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중기부담 경감	상임위 소위 상정 (22.11.23)
5	복지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완화** [기존] 퇴행성 질환 진단 솔루션 등 디지털 의료기기는 인체 위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기 허가 처리 기간 단축 필요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임상심사시험위원회(IRB)의 심사만 거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도록 규제개선 추진	상임위 소위 상정 (22.4.27)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6	복지	**아동복지법**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비밀전학 절차 마련** [기존] 일부 초등학교에서 비밀전학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여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피해아동 등의 비밀전학 곤란 [개선]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비밀전학이 가능토록 개선	상임위 소위 회부 (22.4.27)
7	환노	**환경영향평가법**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기존] 계획·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업 내용의 특성 고려없이 동일한 평가절차 진행 [개선] 사업내용, 지역특성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추정,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스크리닝 제도 단계적 도입	상임위 회부 (23.3.31)
8	국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무인배송 법제화** [기존] 생활물류법 상 택배·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이 이륜차 및 화물차로 제한됨에 따라 드론·로봇과 같은 新운송수단 활용 제한 [개선] 드론, 로봇을 생물법 상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포함하여 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지원	**법사위 회부** (23.4.20)
9	과방	**전기통신사업법**	**지자체 자가망의 주민대상 공공서비스 활용** [기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가통신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음 *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되고 국민들의 통신복지가 확대되도록 함	**법사위 회부** (23.3.21)
10	과방	**정보통신망법**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비스에 한계 * CI : Connecting Information [개선] 행정·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활성화 * 동사업은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를 통해 추진된 내용으로 조속한 입법 필요	상임위 상정 (23.2.9)

붙임4 **규제혁신 완료과제 경제적 효과 분석**

◇ 규제혁신 완료과제 1,027건 중 **산출 가능한 152건**의 **경제적 효과 검증**
⇛ 현정부 기간 내('22.5~'27.5) **약 70조원**의 **경제효과** 예상
△(투자창출, 32건) 44조원 △(매출증대, 24건) 6조원 △(부담경감, 96건) 20조원

□ 개요

○ 규제혁신 완료과제 중 **경제효과 旣발생** 또는 **예측 가능**한 **152건**을 연구기관* 등의 검증을 거쳐 **경제적 효과 산출**

* 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등

□ 경제적 효과

○ **'경제효과 旣발생'** + **'향후 4년 내 투자창출·매출증대·부담경감'** 등 **총 70조원의** 경제효과 예상

- **(투자 창출) 44조원** 규모의 **투자 유발**
  광양 산단 입지규제 완화(4.4조, 포스코),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7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2건의 규제개선**

- **(매출 증대) 6조원** 규모의 **매출 증대 기회 부여**
  수산 부산물 재활용 유형 확대(1,000억, 해수부),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허용(1,900억, 농림부) 등 **24건의 규제개선**

- **(부담 경감) 20조원** 규모의 **국민·기업 부담 경감**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 완화(2조 1,300억, 행안부), 순환자원 인정 범위 확대(1조 570억, 환경부) 등 **96건의 규제개선**

※ 경제효과 산정기간 : 현정부 기간 내 산출 가능한 효과를 분석 ('22.5월~'27.5월)